

자유와 통합, 민주와 공화: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실천¹⁾

박 명 림 (연세대학교 교수 /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소장)

1. 문제의 제기: 송진우, 김준연·장택상, 김대중

주지하듯 21세기 초엽 오늘날 한국사회는 최고의 물질지표와 최악의 인간지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경제와 무역, 과학과 기술, 무기와 군사력에 관한 한 한국은 약소국에서 중진국, 중견국을 거쳐 어느새 선진국과 선도국을 말하는 수준에 도달해있다. 거의 모든 세계 순위는 한자리 등위를 보여주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빛의 속도였던 것이다.

반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자살과 저출산, 청년자살과 노인빈곤을 포함한 인간지표들은 모퉁이 송연할 정도로 세계 최악 수준이다. 동시에, 모든 장래 추계를 계속해서 '오류'로 판명케 하며 가장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시위의 숫자를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지표 역시 세계 선두권이다. 객관적인 주요 국제비교에 따르더라도 종교갈등과 종족갈등이 없는 사회로는 이례적으로 갈등이 높으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발표자는 오랫동안, 이러한 극단적인 빛과 극단적인 어둠의 장기적인 한국적 병존 상황과 질병을, 근대 최고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인류문명에 대한 진단을 빌려, "인류의 현재 상태가 국가의 번영과 인간의 참상이 함께 커가는"--- 칸트의 <<교육학 강론>>의 표현이자 중요한 명제다. --- 한국적 수수께끼(Korean enigma)이자 한국적 비밀(Korean conundrum), 한국적 신비(Korean mystery)라고 강조한 바 있다.

GDP, 반도체, 자동차, 국제특허, 전자정부와 한류[Korean-wave)를 포함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일련의 K- 현상들을 폄하해서는 결코 안되지만, 대한민국의 출범 100년도 안 되어 안팎으로부터 국가소멸에 대한 진단과 경고가 분출하는 현실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로마에 대한 인류의 위대한 선현들의 최고 저작과 연구들의 한결같은 결론은, 로마는 외부의 침략이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자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Niccolo Machiavelli, Edward Gibbon, Max Weber....) 발표자는 이들 선학들의 논저들을 읽어다가며 끝내 그들의 진단과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멸 요인 중의 하나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제국이 무엇보다도 초기 건국

1) 본 초고는 2024년 고하 송진우 학술발표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발표자의 동의 없는 인용과 배포는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내부 분열과 갈등의 악화가 결정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별히 제국과 국가 멸망에 대한 연구들은 그러한 정신의 부패와 퇴락, 인간가치의 붕괴, 내부 분쟁의 격화가, 놀랍게도 물질번영의 정점에서 시작되었음에 주목하는 동시에 초기 정신과 가치의 망각과 실종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치 오늘의 한국 현실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진술한 언명들 같다.

본 발표는 존망의 기로에선 대한민국 갱생과 부활의 한 고갱이와 원천을 초기 대한민국 탄생과 건국의 정신과 원리, 지도자와 리더십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오늘은 그들 중 한 명인 고하 송진우를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보수세력과의 정치연합을 통해 한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4월 20일 국회의원 시절 의회 연설에서 전한 보수 정치인 창랑 장택상의 언명은 고하 송진우의 초기 한국 정치에서의 영향과 위상을 한눈에 보여준다. 당시 연설은 5시간 19분에 걸쳐 진행된 당시까지 한국 국회 최장의 필리버스터 연설이다. ([제6대 국회 제41회 제19차 본회의] “김준연 의원에 대한 구속 동의안 상정 지연을 위한 의사진행 발언”. 1964년 4월 20일. <<김대중 전집>>II-2권)

장택상은 송진우와 김준연을 오래도록 직접 경험한 정치인이었다. 김준연과의 대화에서 보수 정치인 장택상의 아래 발언은, 그들 두 사람 정도의 거물 지도자에게 조차 송진우의 영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상징한다. 국무총리·국회부의장·외무장관에 다선 의원을 지낸 장택상은 고하에게 자겸(自謙)과 존경의 뜻을 담은 ‘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도의 내용은 살신성인과 애국이었다.

김준연: “이것이 다 창랑(滄浪)이 나한테 가르쳐 준 덕이 아니냐?”

장택상: “아니다. 낭산이나 나나 다 고하(古下) 선생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살신성인하고 국가를 위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돌아보는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실천은 우리에게 무엇을 성찰하게 하는가? 특별히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우리 사회의 정치·사회적 분열상과 공공 정신의 실종, 파당주의와 사적 이기주의의 타락한 만연, 인구소멸·국가소멸·학교소멸·지방소멸의 절대 위기를 유념할 때, 우리는 인간과 문명, 정신과 물질, 자유와 통합, 민주와 공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혼용하여 우리 인간 공동체의 미래를 드넓게 개척하려 고투했던 이 탁월한 선각의 길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주제에 비추어 매우 협애한 본 발표는, 송진우의 직접 언명과 행동에 근거하여 그의 중심 사상과 실천을 오늘의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살펴보려는 부족한 초고에 불과하다. (송진우의 사상과 실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박찬욱, <송진우의 삶을 통해 바라본 YMCA운동과 자유민주주의>, <<거인의 숨결: 고하 송진우 글모음 및 관계자료집>>, pp. 905-978을 참조. 송진우의 자유와 민주에 대해서는 상기 논문이 정교한

분석을 하고 있기에 발표자는 이 문제는 소략하게만 살펴볼 것이다.)

2. 유교 비판, 공적 심성, 통합적 단결

고하 송진우의 사상과 공적 실천을 이해하는 초기 골간은 곧 근대 문명국가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거시적인 근대 국가건설과 문명발전의 역사를 제1단계, 1876년 - 1953년 사이의 동서조우·세계전쟁·국가형성 시기, 제2단계, 1953년 - 1987년의 경제발전과 산업화 시기, 제3단계, 1987년 - 현재까지의 세계화·민주화 시기, 제4단계, 현재 이후 다가올 시기를 복지화·인간화의 시기로 나눌 때 고하 송진우는 일찍이 이 전체 근대 과제들을 모두 꿰뚫고 내다본 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다. 세계와 전체를 통찰하되, 그는 자기 시대의 임무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직시하고 실천해간 인물이었다. 전체에의 통찰과 당대적 실천을 결합하기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주지하듯 고하는 일제 강점기 유학시절부터 제일 유학생의 지도자였다. 청년의 시기 이래 그는 국민심성 개조를 중시하여 유교를 반대하고 공적 심성의 발양이 중요함을 깨우쳐왔다. 나아가 국민의 단결, 문화, 봉공, 곧 공적 헌신을 주창하였다. 유교비판과 공적 심성에 대한 강조는 한국에서 근대성 추구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전통 한국 사회를 움직인 한국사회를 공자와 유교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비판이다. 근대 이행의 요체를 간파한 것이다. 그는 “공자의 가르침은 타파될 시대에 이르렀으니 타파하여야 하겠다.” “2천 년 전의 공자의 사상적 권위가 현대를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나아가 “공자의 가르침은 전제 사상의 단서로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원리에도 어긋나고, 민주사상·자치·평등 정치를 실현하는 현재 조류에 적합하지 않다.” 민주주의와 평등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 및 근대와 모순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가르침을 타파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정당방위요 시대적 요구의 긴급한 일이다.”([사상개혁론], <<학지광>> 제3권 1호, 1915년 5월 2일. 이하 인용은 <<거인의 숨결:고하 송진우 글모음 및 관계 자료집>>) 유교 타파야말로 자기 보호요 방어라는, 과거와는 혁명적 전도인 것이다.

그럴 때 공적 심성과 통합은 일제 강점 상황에서 송진우 정치사상과 실천의 최종심 요소였다. “모든 주의와 사상을 실현할만한 단결력이 없어서는 빈승의 공염불에 불과할 것”으로 본 그는 3.1운동의 실제적 실패 경험 역시 “선전의 부족과 사상의 박약보다는 이 운동을 통일하여 계속할만한 중심적 단결력이 부족하였던 것”이야말로 “최후의 공(功)을 주(奏)치 못한” 요소였다. 그에 의하면 “요컨대 문제는 단결력이다. 심력, 즉 봉공심(奉公心)이 발달된 민족은 강자가 되어 우자(優者)가 되고, 봉공심이 박약한 민족은 약자가 되며 천자(賤者)가 된다”고 경고한다.

“결국 우리를 약하게 한 자는 우리요 다른 사람은 아니다.... 만일 강자가 되

자면 힘이 있어야 되겠고, 힘이 있자면 단결하여야 되겠고, 단결하자면 각 개인의 봉공심을 환기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힘), <<개벽>> 제5권 4호. 1924년 4월 1일) 이 때 그가 말하는 봉공심은 개인들의 공적 심성, 즉 사사를 넘는 근대 시민윤리를 말한다. 그는 인류의 최고 철인들과 지도자들이 반복 언명했던,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의 최중요 요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 자신의 정치사상을 앞서 추구한 대표적인 공적 실천이 3.1운동이었다. 본 소고를 통하여 발표자는 근대로의 가장 거대한 주체적 전환점이자 봉우리였던 3.1운동의 근원적인 발원을 가능하게 하였던 단결과 통합, 연합과 연대의 한 중심 기축이 고하 송진우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3.1운동은 주장과 주의, 민족 대표들의 구성과 면면, 지향과 가치에 비추어 근대 이후 가장 대표적인 연합과 연대, 융합과 통합의 최절정의 계기였다.

3. 3.1운동·태평양, 그리고 근대문명:

동과 서, 안과 밖, 민족과 세계의 상향(相響. confluence)

두 세대 전의 양이(洋夷) 담론과 정책, 혹독한 서학 박해와 압제, 한 세대 전의 서학에 맞선 반서구·반서학의 동학의 일대 분출을 고려할 때 3.1운동의 사상과 지향, 민족대표들의 구성은 놀라운 통합과 융합이었다. 천도교와 기독교, 요컨대 동학과 서학, 東과 西가 각각 절반이었으며, 유학과 유교는 전무했다.(이승렬, <<근대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2021.) 누천년 중화체제와 압도적인 유교사상과 전통을 유념할 때 3.1운동에서의 유교 대표들의 완전 탈락과 불참은 이 사건이 지니는 거대한 근대적 문명사적 사상사적 전환을 함축한다.

요컨대 중화체제와 중국요소의 전면적인 주체적 배제와 극복이었다. 송진우가 볼 때 3.1운동은 “4천년 이래 윤회 반복하여 오던 동양적 생활양식을 정신상으로나 문화상으로나 정치상으로나 근본적으로 민중적으로 파괴 건설하려 하는 내재적 생명의 폭발이었다.”[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아일보>>. 1925년 8월 28일- 9월 6일). 즉 “조선민족의 양심의 발동이자 세계 인류의 사상상 공명”이었다.

동학은 신흥종교였고, 기독교는 아직 외래 요소였다. 신흥과 외래의 연대를 통한 전통 체제와 가치와 지배층의 전면적인 타파와 절연, 이른바 신 인류, 새 인간들(*homo novus*)의 등장을 통한 거시 변혁과 발전의 계기였던 것이다. 3.1운동을 계기로 당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미래 대한민국과 민주공화국-의회민주주의를 이끌 가치와 체제, 제도와 인물들이 등장하였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homo novos*의 등장은 Max Weber를 포함한 선학들이 말하는 국가와 문명발전의 한 핵심 요소다.)

일본의 강점과 개인적 유학을 통해 일본의 침략성과 근대성을 모두 체험한 송진우는 3.1운동의 중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최초 움직임의 시작과 함께 빈번한 회합을 통해 최린, 송진우, 현상윤, 최남선 사이에 봉기 준비의 중핵(中核)을 형성한

그들을 통해 천도교와 기독교, 동과 서의 한국 역사상 --- 분열과 투쟁이 아니라 --- 최초의 연합과 연대가 구축되었다. 기독교 지도자 이승훈을 직접 만나서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대를 제안한 사람은 송진우·현상윤·김성수였다. (현상윤, <3.1운동 발발의 개요>. <<사상계>> 1963년 3월호.) 송진우는 일본(정노식·송계백) - 서울(최린·현상윤·최남선)- 기독교와 서북(이승훈)을 연결하는 한 중심 접점이자 고리요 사실상 최고 지도부의 일인이었다.

기독교의 합류와 절반의 비중을 계기로 西, 기독교, 미국은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한국현실의 중심 요소가 되었고, 3.1운동은 한국인들에 대한 서구사회의 단기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협력과 연대의 초기 정초를 놓을 수 있었다. 기독교와 천도교의 만남과 협력, 연대와 합동, 이것은 짧게는 3.1운동은 물론, 한국사회의 가장 거시적인 중심 특징인 안과 밖, 동과 서, 고(古)와 금(今)의 문명사적 상향(相響. confluence)과 상응(相應), 화충(和衷)과 공존의 한 최고의 표상이었다.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대와 합동은, 한국 사회에서 역시 사상 최초로 기호 지방, 호남과 영남, 서북 지방 사이의 시민적 민간적 전국 연대의 최초 등장이기도 하였다.

3.1운동을 계기로 사유와 실천의 태평양으로의 진출과 개안(開眼)과 확장 역시 매우 중요했다. 당시 태평양은 아시아라는 지역과 공간을 넘는 범주였다. 대륙 대신 해양, 전통 대신 근대를 사유하면서 대안 문명이자 체제요, 새로운 이웃이자 사상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고정휴, <<태평양의 발견, 대한민국의 탄생>> <<태평양의 발견과 근대 조선>> <<태평양 시대의 서막과 신대한의 꿈>>)

송진우에 따르면 “세계 대세의 조류는 확실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 방면으로 이동하여 오는 것이 뚜렷하다.” 중국은 이미 탈락하였다. 그는 뒤이을 세계 정세를 예리하게 전망한다.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격인 적로(赤露)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양자가 상대하여 발흥되는 것은 과연 불원한 장래에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협조할까, 충돌할까.세계 대세의 운명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인류의 문화상 총결산이 이에서 감정(勘定)될 것은 상상키 어렵지 아니한가.... 이렇게 보아오면 미·러충돌이 도정에 있어서 일·미 충돌이 전제가 될 것은 상상키 어렵지 않다.” ([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 청년 시절부터 이승만도 종종 언급한 후자는 놀라운 통찰이다.

그런데 태평양의 발견과 연결은 한국문제의 국제적 지정학적 문명적 본질과 성격의 변화를 의미했다. 이제 더 이상 중화체제의 변경이나 변방이 아니라 대륙과 해양, 아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동양지역질서-동아시아평화의 경계요 요충이 된 것이었다. 송진우의 포착은 정확하다. 그에게 “조선은 세계 구성의 일부” “조선문제는 동양의 난관이며 세계의 논점” “조선문제의 해결은 동양 전체 문제 해결의 전제가 되며 또한 요건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은 누구보다도 선명하였다.([세계 대세와 조선의 장래]) 한국문제가 동양평화의 중심이라는 이러한 경계국가적 문제의식은 동서 조우 이후 안중근, 이승만, 신채호를 비롯한 당대 최고 지식인들의 공통된 이해였다. 송진우 역시 그들과 견주어 결코 낮지 않았다.

“지리상으로 말할지라도 조선은 세계교통의 중심로가 되어있다... 통틀어 말한다면 정치적으로나 지리상으로나 조선은 세계 어떤 약소민족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다.

조선문제 여하가 동양 대국을 좌우 여하로 요리하게 된다. 동양에 있어서 만일의 변곡을 일으킨다면 조선문제가 가장 중요한 형세를 일으키게 된다. 과거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으나. 일청, 일로 양대 전역의 원인은 조선문제 그것이 핵심이 되지 아니했느냐. 다시 말하면 조선문제가 없었다면 양대 전역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어떠한 방면으로 보든지 세계의 어떠한 약소민족보다도 가장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과거에도 중요하였거니와 현재에도 미래에도 더욱 중대하다. 세계 어떤 약소민족도 조선의 세계적 지위에 미치지 못한다.”([조선의 세계적 지위]. <<비판>> 1931년 5월호)

그러나 아무리 한국문제가 세계적 지위를 갖더라도 송진우에게 자주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였다.: “혹은 만일 동아의 풍운이 일어나고 이리하여 일·미의 충돌이 발생할 시에는 미국의 세력 하에서 조선의 해방을 희망하며, 혹은 일·로·일·중의 충돌을 예기하여 로·중 양국의 원조하에서 민족의 자유를 촉망하나 이것은 결코 조선 민족의 전통적 정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또한 불허하는 바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자주적 정신이 있는 까닭이다. 자유는 어디까지든지 자주적 행동이며 자력적 해결이 될 것이다. 결단코 타력적 원조와 사대적 사상의 지배와 용인을 불허하는 바가 아닌가”[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4. 민족과 자유와 자유주의

고하 송진우는 일제하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주의 정치인으로 자주 평가 받아왔다. 3.1운동 주도는 물론 대표적인 교육기관과 언론기관에 종사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교육과 언론은, 제국주의 강점시대였기 때문에 공공성 표출의 제일 공간이었던 정치 행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두 주요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음을 뜻한다. 언론과 교육에서의 봉공과 공적 심성의 자기실현이었다.

그는 48인 민족대표로서 3.1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리고는 친일로 변절하지 않고 일관된 민족주의자의 길을 고수하였다. 필자는 종종 3.1운동 민족대표는 33인이 아니라 48인·50인으로 확대되어야한다고 상념하곤 해왔다. 조심스런 평가이지만, 33인은 단지 공적 대표성 이외에는 없지 않았나 싶다. 실제 내용과 영향을 고려할 때 48인·50인으로 확대되는 것이 더 나은 것도 그 때문이다. 33인 대표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인사들이 변절하였으나 고하는 그들을 뛰어넘는 울곧은

민족주의자의 길을 걸어갔다. 많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전향할 때 고하의 지조와 일관성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 남겨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그를 해방과 함께 공적 영역의 지도자로 밀어 올렸다. 해방과 함께 그가 교육과 언론을 넘어 정치영역의 중심인물로 곧바로 진입하고 부상한 것은 일제 강점 시대부터의 공공영역에서의 오랜 훈련과 활동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새로이 진주한 미군 역시 여러 문건에서 그를 민족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할 만큼 강점 시기 고하의 걸음들은 선도적인 것이었다.

그가 주도하거나 참여했었던 초기 문화운동들은 넓은 의미의 근대운동이자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국민교육과 국민계몽운동이었다. 이를테면 물산장려운동, 민립 대학 건립운동, 문맹퇴치운동, 브나로드 운동, 단군-세종대왕-이충무공의 삼성사 건립 추진 등은 민족문화 창출과 근대국민 형성을 위한 운동들이었다. 동아일보 계열과 인촌 김성수가 함께 가고자 하였던 길인 민족주의와 근대화는 송진우에게는 전혀 분리된 두 개가 아니었다.

즉 민족주의를 통한 민족의식의 복원과 근대 국민형성(nation-building)의 이 중과제의 추구였다.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주요 연구들이 잘 밝혀내었듯 전통이 아니라 근대를 향한 민족과 민족주의의 호명과 동원이야말로 국가건설과 국민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반과 토대를 제공하였던 것이다.(Hans Kohn, Ernest Gellner, Eric Hobsbawm, 이흥구, Benedict Anderson). 송진우에게 민족과 민족주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이 때 그가 교육과 계몽을 넘어 좀 더 넓은 문화의 영역을 통한 근대국민을 창출하려 시도하였다는 점은, 당대 한국인들의 심성 구조와 저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전통에 대한 맹목과 부정, 현양과 폄하라는 이분법을 넘으려는 도저한 구상을 읽게 해준다.

다른 한편 고하는 한국에서 자유, 자유주의 수용과 발전의 한 중심 통로요 주체였다. 동아일보 계열과 김성수를 포함하여,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사회를 역사적으로 돌아보건대 송진우의 자유주의는 두드러지게, 그리고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영국과 일본 유학을 통해 고하 송진우 - 인촌 김성수 - 설산 장덕수 - 해공 신익희 - 유석 조병옥, 그리고 윤보선과 장면 - 민주당 -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한국의 초기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포괄하면서 이승만 정부 하 반독재투쟁과 4월혁명의 중심 세력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 초기 자유주의의 가장 뚜렷한 주류였던 것이다.

고하와 인촌이 놓은 초기 자유주의는 건국 이후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담론과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급진공산주의와 우파독재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대안 담론이자 운동이었다. 자유주의적 공화주의가 송진우의 초기 건국 노선의 중심이었다면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훗날 반독재투쟁과 4월혁명의 골간 정신이었다. 6.25 한국전쟁 방어로 수호한 자유와, 4월혁명으로 쟁취한 자유가 송진우에게는 모두 들어있었고, 한민당-민주당을 포함한 자유주의 세력들은 이 두 가지 자유를 절묘하게 연결하였던 것이다.

북한의 공산독재와 자유주의 전면 폐색, 그리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 정부의 자유주의 제한을 상념할 때 한국에서 이들 송진우-김성수-민주당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그룹이 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남한이 북한의 독재와는 크게 다른 민주주의의 길을 가는데 이들 초기 자유주의 세력이 끼친 기여는, 제도와 사상 두 측면 모두에서, 크게 상찬받아 마땅하다.

동아일보와 민주화 운동그룹을 포함해 부분적으로는 박정희 시기의 반독재 담론 역시 이들 그룹이 주도하였다. 이 초기 자유주의 그룹은 70-80세대, 또는 86세대(60년대 출생의 80년대 학번들)의 민주주의의 등장 이전 시기에는 한국의 반독재 민주화 담론과 자유주의 운동의 분명한 중심 주류였다고 할 수 있다.

5.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 의회주의,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송진우는 식민시기 동안의 좌파 배제, 해방 직후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및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불참에서 볼 수 있듯 공산주의에 대한 분명한 반대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경영과 논조를 주도하였던 <<동아일보>>에 다수의 사회주의자들도 기고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주당의 창당과 강령에서 진보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인물들과 요소를 수용하여 넓은 이념적 폭을 보여주었다.

송진우는 중국의 초기 공화주의 운동과 범아시아주의를 대표하는 쑨원(孫文)을 크게 존경하였는 바 그는 중국 근대 민족주의의 원형이자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송진우는 쑨원의 삼민주의가 중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그 이상적 실현을 볼 것으로 믿었다.([年頭所感]. <<先鋒>> 1946년 1월. 피살 전에 집필하여 기고하고 사후에 출간] 장제스와 마오쩌둥, 중국의 좌파와 우파가 모두 쑨원의 자녀들이었다는 점은 크게 시사적이다. 여기에서 고하가 쑨원의 한국적 길을 상념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론해본다. 즉 한국적 민주 공화주의의 길을 말한다. 실제로 고하는 해방 이후 건국강령과 노선의 수립과정에서 대표적인 민주공화주의노선을 걸었다.

건국을 위해 해방 직후 송진우는 모색 단계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건준) 및 조선인민공화국(인공) 반대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 봉대, 그리고 국민대회 준비회를 추구하였는 바, 그 핵심 이유는 몇 가지의 주요 원칙 때문이었다.

첫째는 공산세력의 건국 주도에 대한 분명한 반대였다. 송진우는 공산세력의 전체 민족 대표와 건국 이니셔티브를 용납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시의 한 미제 24군단 정보참모부의 자료에 따르면 ([Activities of Left-wing Korean Political Parties]. 신복룡, <<한국분단보고서>>3)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 총독은 송진우에게 친소(親蘇)정당을 조직하도록 부탁했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만약 이 기록이 맞다면 민족주의자인 송진우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물론 조선총독부의 제안을 넘어, 종전 이후 연합국의 점령 시기에 내부 연합

과 연대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한 핀란드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사례에 비추어, 송진우-여운형 사이의 초기 내부 연합과 연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커다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독립을 향한 집념: 고하 송진우 일대기>>: 여운형, <<<몽양 여운형>> : 심지연, <<한국민주당 연구>>I)

둘째는 일본 후원 - 총독부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즉 고하는 총독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송진우의 일관된 노선인 민족적 자주적 건국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고하의 고결성과 탁견이 돋보이는 점이였다. 대부분의 연구와는 달리 이 점에 대해 일부 기록들은 송진우에 대한 총독부의 제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최하영: 森田芳夫: 이동화. 이 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심지연, <<한국민주당 연구>>I을 참조),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미군의 기록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분명하다고 하겠다. (C. Leonard Hoag, <America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신복룡·김원덕 <<한국분단보고서>> 1 : XXIV Corps G-2 Section, <Activities of Left-wing Korean Political Parties>)

셋째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민주적 절차와 민중적 참여의 결여 때문이었다. 아래로부터의 국민참여를 말한다. 민주주의자로서 고하에겐 이 이유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는바,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곧 민중이 정부를 건설해야한다는 민주적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송진우에게는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였다. 당시 일부 인사들이 두 번째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총독부 제안을 수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실제로 정권을 인수하지도, 치안 기능을 행사하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당시에 만약 진보-보수주의들, 민족주의자들-사회주의자들이, 고하처럼 한 목소리로 총독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념을 넘어 통합적으로 하나의 건국준비 조직을 건설하였다면 국가건설의 과정은 더 단합되었고, 더 통합적이었을는지 모른다.

이 때 고하의 길은 다중적 종합이었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정부 수립 시점까지 임정의 정통성과 과도성을 인정한다. 여기에는 임정의 국내기반이 전무하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둘째 “의회 차원에서” 국내적 기반을 거의 독점한 주류로서 국민대회를 통한 의회 결성을 추구한다, 셋째, 연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독립국가를 수립한다는 방식이었다. 넷째 이를 수행할 정치적 주체로서 민족주의 정당을 조직한다. 여기에는 명분과 정당성, 즉 절차적 민주주의와 합법성을 준수하려는 고하의 구상을 엿볼 수 있다. 임정의 정통성 인정과 존중, 그리고 의회민주주의, 아래로부터의 참여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라는 경로를 통한 근대국가 건설 구상이었던 것이다.

특별히 고하는 당시 정당과 정치세력에 관한 급진좌파와 극우반동을 제외한 폭넓은 좌우 공존과 경쟁을 모색하였다. 폭넓은 공화주의 이념과 체제 구상이었던 것이다. 의회제 내에서의 진보·사회주의와 보수·자유주의의 건강한 경쟁과 공존을 추구한 것으로서 좁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훨씬 넘어서 영국의 진보자유주의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사상과 관

견은 일관되게 민주공화국을 추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 및 정책, 그리고 1948년 등장하는 건국헌법 및 대한민국과 근사(近似)·일치하는 것이었다. 고하의 건국 구상은 해방과 건국의 시점에 당대 민중들과 시대정신의 고갱이였던 것이다.

실제로 송진우는 한국민주당의 건설을 앞서 주도하였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창립 당시 한민당은 80%가 민족운동 관련자였고, 10%는 사회주의자였다. 친일파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은 고작 14%로서 이는 당시 좌파 조직 못지않게 적은 비율이었다. 즉 한민당을 친일파 정당으로 본 일부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또 동아일보-보성전문 계열의 인사들은 42%였고, 나머지 상당수는 기독교계열이었다. 이들이 한민당의 양대 세력으로서 극우도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었다. 사회주의 세력 역시 10% 이상을 점하고 있었다. (윤덕영, <일제하·해방 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 노선> 2010 ;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한국 자유주의의 형성, 송진우와 동아일보>> 2023)

민족주의 위주로서 극우 정당도 친일세력의 정당도 아니었던 것이다. 즉 기존 통념과는 달리 초기 한민당의 구성과 성격은 일종의 중도우파-민족세력 주도의 좌우연합정당이라고 할 수 있었다. 초기 한민당의 구성과 성격은 그것을 주도한 고하의 통합주의적 성향과 국량, 포용적 능력과 의도, 민주주의적 체제구상을 잘 보여준다. 즉 그는 탁월한 능력과 폭넓은 인맥을 갖고 해방 초기 국면을 주도하던 균형있는 통합주의자이자 민주주의자요 민족주의자였던 것이다.

고하는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 및 국민대회 준비회 위원장이라는 민족세력의 핵심으로서 활동하면서 미국 군정과의 협력을 적극 고려한 상황에서 국제주의와 공진하는 ‘민주주의적 민족국가’를 추구한 것이었다. 오늘의 시점에서 건국과 분단 시점의 분열과 적대를 다시 성찰해야하는 우리는 고하에 대해 통합적인 재해석·재음미·재평가를 시도해야한다고 판단된다. 민주화 이후 진보-보수 정부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동시에, 심각한 남남갈등과 진영대결을 노정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고하의 시야와 관건, 국량과 지향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를 향해 현실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함께 갖기 때문이다.

6. 평등과 경제적 민주주의

심각한 빈부격차와 거대 재벌체제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가 못지않게 주목해야할 점은 송진우의 경제체제 구상과 초기 한민당의 경제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자주 독립국가 완성, 민주주의 정체 수립,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창당 [강령]), “국민기초 생활확보,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중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토지제도 합리적 재편”(창당 [정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당시 한민당의 정강정책은 사실상 사회민주주의=수정자본주의 노선이었다. 나아가 “대자본·대지주에 대한 통제정책과 의료기관의 국영 또는 공영, 사회보험이 실시”를 주장하였다.(함상훈, “我黨의 主義政

策”.1945.11.17.)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및 건국강령, 대한민국 건국헌법과 거의 동일하였다. 즉 근대 이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주류세력들의 체제구상의 본령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제헌 당시 건국헌법의 경제조항은 아래와 같다. 역시 민주공화국의 근본 기치에 근접하며, 송진우와 한민당의 그것들 역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제84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유진오, <<헌법해의>> : 정종섭, <<한국헌법사문류>>]

북한이 남북 체제경쟁에서 완전 패배하고 탈락한 현실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평등과 복지체제를 추구한 고하의 탁월한 선견은 오늘에 충분히 되살릴 가치가 있다. 신자유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좁은 관점에서 균등경제와 복지강화를 사회주의, 또는 좌파 경제체제라고 비판하는 해석과 담론들이 초기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건국헌법에 대해 얼마나 크게 곡해하고 있는지를 송진우의 정견과 한민당의 정강정책은 잘 보여주고 있다.

송진우는 1945년 12월 22일 방송된 [한국민주당의 정견]을 통해 “비록 독립한 국가가 되었다라도 그 권력이 일인의 전단한 바 되고, 일계급의 독재한 바 된다면 무엇으로서 우리의 생명재산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민중에 의하여 민중을 위한 민중의 정치가 실현됨을 따라서 민중의 자유가 확인되고 민중의 평등은 보장될 것.” “과거에는 자유에만 치중하고 균등에 있어서는 진실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가가 이윤추구에 광분한 나머지 경제적 균등의 기회는 파괴되고 따라서 근로대중의 생활은 그 안정을 잃었던 것” “우리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독재적 전횡을 타파하는데 있는 것 같이 경제적 민주주의는 독점의 자본을 제압하는데 있는 것”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 그 정책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와 일치된 점을 발견치 못하리라고도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핵심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연결과 동시 추구였다. 송진우는 당시 “현단계는 사회민주주의 혁명 단계”라고 주장하였다.([年頭 所感])

송진우의 [정견]은 한국의 정통 자유주의 진영, 초기 보수세력의 폭과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언명이 아닐 수 없다. 해방 직후부터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토록 강조한 정치인은 매우 드물었다. 개인독재와 계급독재를 넘어 자유와 평등을 두 날개로 삼아 민중과 근로대중을 위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송진우를 따르다면 당시 이미 첨예하던 좌우의 차이와 갈등은 소멸되어 하나로 융합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복지체제를 살린 수정자본주의, 루즈벨트의 뉴딜 민주주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사회국가·사회적 시장경제 노선과 정책의 핵심 골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테면 양극단을 지양하려는 루즈벨트의 언명은 송진우와 다르지 않았다. “나는 집중된 사적 권력의 사적 사회주의(private socialism)에 대해, 내가 정부사회주의(governmental socialism)에 대해 반대하는 만큼이나 똑같이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만큼이나 똑같이 위험합니다. 사적 사회주의의 파괴는 정부사회주의를 회피하기 위해 전적으로 필수적입니다.”(“A Recommendation for the Regulation of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ies”(March 12, 1935), *The public papers and addresses of Franklin D. Roosevelt. Volume four, The court disapproves, 1935*)

기실 공산주의의 붕괴 및 신자유주의의 양극화와 독점체제가 심각해지는 오늘날 들어도 고하의 비전과 관건은 놀라운 선진적 혜안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북구(北歐) 복지국가-사회적 시장경제-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을 반세기 전에 이미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온건한 결합을 통해 자유와 평등, 나아가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obert Dahl,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 C.B. Macpherson, *The Rise and Fall of Economic Justice and Other Essays*]

한민당의 정책 세목에는 실제로 기업의 경영 및 관리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 토지 사유의 극도 제한 및 농민 본위의 경작균등권 확립, 광공업 육성을 위한 계획경제수립, 주요 공장 및 광산·철도의 국영과 같은, 임시정부 헌법-건국헌법과 같은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 세목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부분적으로 사회주의에 근접하는 수준이었다. 이런 한민당을 극우정당으로 해석한 그동안의 해석들은 오류였던 것이다. 동시에 협애한 반공주의를 대한민국의 중심 건국정신으로 해석한 것도 오류였던 것이다. 그것보다는 훨씬 넓은 체제와 노선, 이념과 헌법 지평 위에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다.

7. 헌법제정 준비, 탁치논쟁, 현실적 이상주의

한민당은 1945년 12월 16일에 1946년 1월 10일 국민대회 개최를 결정하였고, 18일에는 지역 및 단체대표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1월 10일의 국민대회에 상정할 대한민국 헌법대강을 준비하기 위한 헌법연구위원 11명을 선임하였다. 모두 송진우 생전의 일이었다. 당시 선임된 헌법연구위원들은 김병로, 김용무,

이인, 강병순, 송진우, 김준연, 장택상, 서상일, 정인보, 이극로, 백남운이었고, 후에 추가로 선임된 10명은 조병옥, 윤보선, 백남훈, 함상훈, 김약수, 원세훈, 고창일, 한근조, 안재홍, 김여식이었다.

가장 빠른 헌법제정 기구의 구성이었다. 이는 해방 이후 최초의 헌법제정 논의이자 당대 최고 수준의 구성이었다. 이념의 폭 역시 극좌와 극우를 제외하고는 진보-보수 모두에 폭넓게 걸쳐 있었다. 한마디로 시점과 폭과 수준에서 놀라운 건국교부-헌법제정교부들(founding fathers) 진용의 편성이었다. 이는 12월 20일 임정이 조직한 헌법기초위원회와 함께 활동을 개시하였다. 정당창당(대의기구), 국민대회 개최(민중참여), 헌법 준비(법률제정)라는 치밀한 고하의 삼면 국가건설 구상은 곧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당시 고하 송진우만이 이 셋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임정의 정통성과 과도성 및 미군정의 현실적 점령을 인정한 상황 위에서 38선 철폐와 양군철폐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고 있었다. 38선 철폐와 양군철폐는 매우 이른 주장이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서 신탁통치(탁치)문제의 전면 등장과 좌우 과격파의 득세로 인한 이념적 양극화와 절대화의 흐름 속에 송진우의 원대하며 현실적인 중용진보적(中庸進步的) 건국구상은 좌절되고 말았다.

좌우 극단주의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해방의 해를 넘기지 못한 비극적인 송진우 암살은, 개인적 좌절을 넘어 해방국면에서 통합노선의 최초의 비극이자 최초의 실패를 의미했다. 그는 피살 전날 밤늦게까지 김구의 사무실에서 임시정부 인사들과 탁치문제에 대해 논의했었다. 일관되게 임정 지지와 반탁을 고수해온 송진우와 임정측은 단지 반탁의 방법, 그리고 미군정에 대해서만 입장이 달랐다. 당시 미군정청 공보부 자료는 신탁통치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응과 폭발, 분열과 투쟁을 초기 한국 국가의 재건과정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이라고 언명하며 송진우 암살을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Political Trends, No. 16. 15. Jan. 1946]

그러한 사건들 중에는 미군정에 대한 1946년 1월 1일의 김구의 ‘도전’도 포함되었다. 또 다른 미군 공식기록들은 그 도전을 군정청에 대한 쿠데타(coup d'état) 시도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다.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Vol. II, p.41 : “Trusteeship”, <<한국분단보고서>>2] 이는 선명성과 단급성이 결합된, 근본적 민족주의 노선을 표현하려 한 것이었을 것이다.

명백한 반탁 노선을 견지하였으되, 민족적 목표와 국제적 조건을 결합하려 한 냉철한 이성적 현실주의자 송진우의 암살은, 정치적 주장과 노선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이념적 정념적 분노(ressentiment)와 극단적 정치폭력의 서곡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국민들의 가공할 개인적 집단적 고통을 예견케 하는 비극이었다. 그 비극은 현실과 이상, 민족과 세계를 결합하려했던, 해방 직후 가장 뛰어난 현실적 이상주의(practical idealist)의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치른 대속(代贖)이었다. 그러한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내부 폭력으로 상실한 것은 미래 한국으로서는 너무도 큰

손실이었다.

8. 위대한 선각의 벌금에 기대어

역사는 늘 뛰어난 선각들에게 벌금을 요구하고 그들의 벌금을 통해 후대들은 더 나은 가치와 체제를 영위한다. 선각의 벌금은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력을 갖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선각 고하 송진우는 생명을 벌금으로 내고 후대들에게 과업을 넘겨주었다. 당시 세계적으로도 선진적 경로였던, 의회민주주의=민주공화국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결합을 추구했던 고하의 길은, 좁은 과거 이념의 잣대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21세기 한국현실을 보매, 우리는 이제 고하의 사상과 실천에 대한 협애한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산주의는 반대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수용하여, 민주적 의회적 방법으로 자유와 민주, 복지와 평등의 길을 제시했던 그의 민주공화국 구상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진영갈등과 대결을 넘는 통합의 정치를 배워야 한다. 나아가 형평과 공영을 강조했던 길을 복원하여 돈과 물질 만능주의를 바로 잡아야한다. 위기에 직면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현실과 세계질서를 늘 함께 고려한 송진우의 민족적 국제주의도 잘 살려낼 필요가 있다.

송진우를 바로 읽고 제대로 평가하는 지혜로부터 우리는 (과거의) 건국정신을 옳게 자리매김하고, (미래의) 통합과 공존의 정신을 바로 찾는 넓고 깊은 수원(水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끝없이 갈라지고 다투는 오늘의 우리 사회, 공동체, 조국, 민족의 현실을 돌아보매 넓고 길고 깊은 역사대화과 미래비전을 마련해주고 떠난 선각 고하의 길 앞에 다시 숙연해지는 소연(所然)이다. 고하를 과거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오늘과 미래에 다시 살려내야 하는 것이다.

후대를 위해 벌금으로 생명을 치른 한 고결한 선각의 삶을 되새기며, 비록 물질적으로는 발전하고 번영하였으되, 세계 최고·최악 수준의 자살과 저출산을 노정하고 있는 오늘 우리 공동체의 현실 앞에서, 오늘의 우리 세대가 선대와 후대를 향해 다시 옷매무새를 매만지고 들메끈을 동여매야 하는 까닭이다. 후대에게 우리는 정녕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그를 위해 오늘의 벌금을 치르고 있는가? 다시 고하 같은 새 선각이 절실한 오늘의 시대다.